

2021년도 추가경정예산

맞춤형 피해지원 대책

규모 총 14.9조원

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



7.3조원

①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+ 자금 6.7조원

- 규제업종
- 집합금지(연장): 500만원
 - 집합금지(완화): 400만원
 - 집합제한: 300만원
- 일반업종
- 경영위기(매출감소 60% 이상): 300만원
 - (매출감소 40% 이상): 250만원
 - (매출감소 20% 이상): 200만원
 - 일반(매출감소): 100만원

②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0.2조원

집합금지(50%)·집합제한(30%)
3개월간 감면

③ 소상공인 금융지원 0.2조원

저신용 소상공인 저리융자 신설,
폐업 소상공인 브릿지 보증 신설 등

④ 피해업종 지원 0.2조원

농어업, 문화·관광·체육업 등

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



1.1조원

①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0.6조원

특고·프리랜서(기존 50만원, 신규 100만원)
법인택시기사, 전세버스기사(70만원)
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(50만원)

②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0.45조원

등록노점상 등 한계근로빈곤층 소득안정(50만원)
생계위기가구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
(5개월, 총250만원)

③ 필수노동자·장애인 지원 0.05조원

필수노동자 마스크 지원, 장애인 돌봄 지원



긴급 고용대책



2.5조원

① 고용유지 지원(24.2만명) 0.3조원

② 청년·중장년·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(25.5만명) 1.8조원

③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0.2조원

④ 근로가구 돌봄·생활안정 지원 0.2조원

방역 대책



4.2조원

① 코로나 백신 구매·접종(7,900만명분) 2.7조원

② 진단·격리·치료 등 방역대응 0.7조원

③ 의료기관 손실보상 0.7조원

④ 코로나 치료 의료인력 지원(2만명) 0.05조원